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ㄴ.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소관 기본 계획안 및 집행 계획안을 심사한다.
- ㄷ.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관장 사무로서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ㄹ.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국가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 구성이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집행 계획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 ② 기본 계획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토대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작성되며, 이 때 그 기본 계획안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작성한 기본 계획 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④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은 집행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군·구 계획은 시·도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 A시에 지진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 A시에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난 등의 급박한 응급조치가 요구되므로 A시 B동의 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원 명령을 발하였다.

- ① B동의 동장은 동원 명령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시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A시의 시장은 지진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일시 사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②의 경우, 시설 또는 장비의 일시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도의 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동원 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그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그에 따른 재해 보상금은 A시가 부담한다.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상으로 치료를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재해 보상금 뿐만 아니라 휴업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의 유족과 같은 보상을 한다.
- ③ 부상에 대한 재해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④ 치료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2017년 11월 24일 현재 민방위대로 조직되는 자는?

- ① 1991년 7월 1일 출생하였고 2010년 3월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인 남성 甲
- ② 1977년 3월 1일 출생하였고 2017년 8월 1일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의 프로그램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남성 乙
- ③ 1993년 6월 1일 출생하였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남성 丙
- ④ 1995년 4월 1일 출생하였고 현재 주한 미군 부대 고용원인 남성으로 민방위대에 지원한 丁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35세의 남성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B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 甲은 B기업의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B기업 직장 민방위 대원은 20명이다. 甲은 2017년 8월 31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A시 ○○동에 거주하면서 1년간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 ① 甲이 퇴직함으로써 B기업의 직장 민방위대 대원이 19명이 된 경우,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 ② B기업의 직장 민방위 대장은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A시 ○○동의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B기업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으면 A시 ○○동의 동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甲의 지역 민방위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한다.
- ④ A시 ○○동의 동장은 甲을 추가한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2018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32세의 남성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인 A회사(서울시 B구 C동 소재)에 재직중이다. 甲은 A회사의 직장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있는데, A회사의 장(長)인 乙은 A회사에서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長)인 丙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2017년 9월 27일 9시에 실시하고자 한다.

- ①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B구의 구청장이 2017년 9월 19일 24시까지 丙을 거쳐 甲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甲이 없으면 乙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② 甲이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면 2017년 9월 27일 8시까지 그 사유를 甲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B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甲이 교육훈련 통지를 받았음에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 ④ 甲이 6개월간 외국 체류 중임을 이유로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乙을 거쳐 C동의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이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이 민방위계획에 따라 대피호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문 18. 「민방위기본법」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지역에 대형 산불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관할 도지사는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인 甲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민방위 대장 乙)의 동원을 명하였다.

- ①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② 甲이 비상대피시설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가기 위해 제거한 경우, 甲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③ 乙이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 ④ 乙이 민방위 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방위를 끝내고 돌아오는 甲에게 자신의 집 공사를 하게 한 경우, 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상 예비군의 무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이 침투한 지역에서 적 소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전시에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무장 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이를 진압할 수 없을 때 무장 소요 진압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